

시론



김 일 태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두 동강났다. 실로 있을 수 없는 슬픈 일이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 언론인조차도 조롱의 언어로 한국의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독립기념관 관광 임명도 옹호했다. 한술 더 떠서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인가"라는 궤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사고방식은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아베의 외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베 신조의 중군 위안부 망언을 연상시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2015년 창당한 신보수주의와 국민주의의 일본 극우 정당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에서 2017년 '일본의 마음'으로 당명을 변경한 극우적 이념을 답습한 것으로 친일 반민족적 발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축 행사가 분열된 것은 1947년 미군정 시기에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으로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좌익은 남대문에서 개최한 삼일절 기념식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국경일로 정해진 광복절 경축 행사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은 처음이다.

이런 상황은 아직도 일제 잔재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서 초래된 것이다. 대한매일신보(1910년 6월22일자)의 '토왜천지(土倭天地)'라는 글에서 유래한 토착왜구는 일본을 흠모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친일

두 동강난 광복절

파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역사학과 경제학 중심으로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적 이념의 뉴라이트(신우익) 사관이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의 문헌자료를 이용해 계량적 방법론으로 일본의 철도, 항만시설, 농업 관개시설 및 법과 제도 체계의 도입 등의 원인(설명변수)으로 한국이 근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경제이론에 합당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일제 강점기에서는 원인과 결과 간에 양(+)의 상관관계(correlation)일 뿐이지 인과관계(causality)의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에서 이런 원인(특정행위)들이 식민지 물자 강탈과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유발(cause)시킴으로써 식민지 근대화가 아니라 수탈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서 적국의 점령이나 지배에서 잔재를 청산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남부 지역을 통치한 페탱 원수의 비시정권(1940-1944)은 독일 나치에 항복하고 괴뢰정권으로 부역했던 반면에 영국에 망명한 드골의 자유 프랑스와 국내의 레지스탕스는 나치에 저항했다. 종전 후에 프랑스는 임시 정부를 통해서 특별 법정을 설치해 공소 시효 없이 불과 4년의 비시정부와 나치에 부역했던 수만 명을 기소했고 대략 1만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비시정부의 국가수반 필리프 페탱(사형 감면으로 옥중 사망)과 총리 피에르 라발(사형)을 비롯해 정치인, 공무원, 경찰, 언론인, 심지어 여성도 단호하게 처벌했다. 그럼에도 오랜 양속기간의 프랑스와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 보불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쓴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그러나 일본 패망 이후 한국의 일제 잔재 청산은 패전국 일본을 분할 통치하는 대신에 식민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함으로써 기회가 박탈당했다. 맥아더 사령부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침략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1천100만 명(도쿄신문, 2006년 8월7일자)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이 일본 군국주의 표상 히로히토 천황에게 있었고 미 의회의 쇼와천황 전범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맥아더 사령부는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고작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강경 군부 세력 7명만을 처형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했고 전략적 협상으로 전황제를 유지하는 대가로 평화헌법과 미군을 주둔시키도록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1943년 미·영·중화민국 연합국 수뇌들이 카이로에서 모여 "3대 강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를 유념하여 적절한 때(in due course)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일 것임을 결의한다"에서 "적절한 때"의 해석이 엇갈리지만 카이로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이승만정부와 친일 반민족적 세력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1951년 법이 폐지돼 일제 잔재의 청산은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殉國先烈)의 희생으로 찾아온 광복, 역사를 잊으면 굴욕은 반복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역사로부터 일본이 저지른 만행과 드러낸 야욕을 잊지 말고 친일 반민족적 잔재를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의 선린우호로 나아갈 수 있다.

社說

전남산 수산물 日 원전 오염수에서 안전망 구축 만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류를 따라 추적하는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여전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감시 체계를 강화해 왔다. 먼저 18개 대형 위판장에서 수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이 주체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50개 위판장 물량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또 시중 수산물을 대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270건 이상을 수거해 요오드·세슘 등을 확인한다. 한때 품귀 사태가 벌어졌던 천일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력제 가입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덕분에 주요 수산물도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 올해 1-7월 kg당 전복 산지가격은 1만 9천95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710원)과 비슷한 시세를 보인다. 납치(1만4천785원→1만4천

646원)는 물론 생산량이 지난해 75t에서 올해 2천165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우럭(9천394원→9천84원)도 마찬가지다. 미역의 경우 지난해 193원에서 올해 305원으로 58% 상승했다.

전남도는 모두 적함으로 판정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으며 8회에 걸쳐 총 6만2천600t 가량을 원전 앞 바다에 흘려보냈다. 전체 보관분이 130만t을 넘고 30년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작일 뿐이다. 큰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K-푸드의 선두에 서 있는 전남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관건은 망고와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믿음이다. 생산 단계부터 검사를 더욱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낱낱이 신속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중 유통 직전까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일본 주변 해류 흐름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안전에 틈틈이 없어야 한다.

미성년자 겨냥 딥페이크 범죄 국가적 대응 강화해야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의 한 보고서가 국민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여성의 얼굴을 합성·유교하는 성범죄다.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비상 사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배포를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하고 국가 영상 사제를 지원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가해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 개정안은 형사처벌 외에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제도 등의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이며, 교원지위 보호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관할 교육청 등이 사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자·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은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착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울)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다. 중대범죄다.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성착취다.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허위 영상 사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도 강화해야 한다.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라는 낯뜨거운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기고



김 미 남
前 청와대 행정관

영남은 오랫동안 국가 집권의 주체 세력이 되면서 행정의 노하우는 물론 중앙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포진돼 왔다.

흔히 영남 출신에 대해 학맥과 지연으로 묶여 결속력이 강하다는 말을 한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보는 대 체적인 평가도 그렇다. 특히 중앙 정부 내 공무원들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역의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도 타 시·도에 비해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잘한다고 하는 평가다. 오랜 집권 세력으로 형성된 인맥과 차곡차곡 쌓아온 훈련된 업무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자 한다. 전남 동부권이 고향인 모 언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부산 지역 언론에 입사 후 종사해 왔다. 사회 생활과 사업을 하던 중 굴곡이 있을 때면 주변에서 절실한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도움을 준 이유는 특별할 것도 없는 딱 하나다. 같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 동지 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평생 감사할

영·호남 공직사회의 차이

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호남은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권과 정부 내에도 포진된 호남 출신 인맥은 물론 요직에도 많지 않다. 공직 사회 내에서 호남 출신 향우 간 서로 결속력이 강하다거나 끈끈하다는 평가를 들어본 바는 없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중앙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는 핵심 사안들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호남 인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럴 때면 공직 행정의 영역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대통령실(이전, 청와대)에 집중하거나 얽매이는 경향이 강했다.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선택과 방법을 우선시하다 보면 지방 정부와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호남은 중앙 정치력에서도 밀린다고 한다. 현재 여·야를 포함해 호남지역 내 내로라할 만한 힘 있는 유력 정치인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당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권도 과거와는 달리 이전 영남 출신이 주축 세력이 됐다.

최근 8월에는 민주당 당대표를 포함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었다. 호남에서는 전부의 이성은 의원과 광주의 민형배 의원이 출마했으나 이번에도 지도부 임명에는 실패했다. 최근 10년간 민주당 지도부 임명에 실패하면서 호남 정치의 위상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중앙 정부

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 정부에서도 매우 곤혹스럽다. 그렇다! 매년 예산 확보 계절이 돌아오면 가장 절실한 도움 중 하나가 국회 권력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의 고시 출신 간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지방 공직사회에서는 고시 출신을 빗대어 국장이 직업이라는 비아냥의 말이 나온다. 3급(부이사관) 승진 이후 장기간 국장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생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와의 인사 교류에는 회의적이며 지방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쉽사리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비단, 고시 출신 간부들의 개인 성향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출신 공무원들의 중앙 정부 근무에 따른 기피 이유를 찾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와 인사 시스템 개선으로 그만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이들에게 중앙 정부의 근무 경험은 지방 정부의 행정력을 향상하고, 상호 간 이해와 소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 정부 고시 출신 간부의 인사 제도와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독자투고



가을철을 맞아 등산, 캠핑, 별초,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는 가을철 발열성 3대 질환 중 하나로 오리엔타 쯔쯔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라는 균에 의해 감염된 틈진드기 유충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쯔쯔가무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

혈관염을 발생시킨다. 감염되면 10-12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물린 부위 주변엔 다른 질병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가피가 형성된다.

쯔쯔가무시를 예방하기 위해선 야외 활동 시 긴소매 옷과 긴바지, 양말 등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또 야외에선 돛자리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후엔 즉

시 샤워나 목욕을 해 진드기를 제거해야 한다. 입었던 옷 역시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쯔쯔가무시는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은 없지만 상당히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이니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미리 알고 예방해 올 가을에는 안전한 야외 활동과 즐거운 추석 성묘가 되길 바란다.

〈조경애·신안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병영〉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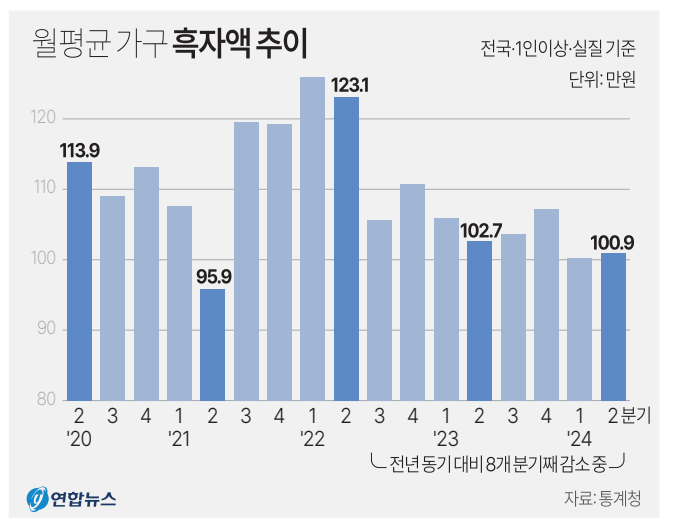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가계 여윌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 100만원선 '위태'

자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등에 쓰이는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원(1.7%) 감소했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에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다. 주된 배경에는 고통가로 쪼그라든 실질소득이 있다. 최근 2년 중 4개 분기 동안 가구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감소 폭도 많게는 39%에 달했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비용 역시 흑자액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 이자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6천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1천원까지 치솟았다. 쪼그라든 가계 여윌돈은 결국 가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재화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의 한 축에는 빠듯해진 가계 살림살이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